

월/요/광/장

최병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는 미디어 관련법 등 6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국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실시 등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난항과 파행을 거듭해왔다. 개정 법률안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방송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미디어 법’ 충분한 논의 거쳐야

한 법률(정보통신법) 등이다.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문·방송·뉴스통신 간의 경영(요차 소유)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경영허용과 관련된 것으로 대기업과 외국자본, 신문사와 통신사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규제의 파격적인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줄기를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의 법률 개정논리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와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산업이 이윤논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기본 윤리인 사명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성인란 생산되는 미디어 서비스의 정보내용이 다양해야 함은 물론 소유의 다양성도 포함된다. 그런데 경영은 소유의 다양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에서 신문·방송·뉴스통신 간의 경영을 금지한 신문법 15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란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나라당 방송법 홍보자료를 보면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약 1조5천600억 원 규모로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이 확장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 위기와 더불어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광고시장의 성장률은 그 하락이 폭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디어 관련 법안은 미디어 소유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한국 언론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전제로 한, 시간 때우기식의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한나라당 안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30년 간 유지되어 온 방송정책의 전환은 급진적 이기보다는 몇 년간의 조사와 연구 활동을 거친 점진적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안개 속 ‘6월 정국’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를 맞는 6월 정국의 ‘시계’(視界)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를 겪으며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거센 ‘북풍’(北風)이 몰아쳐 한반도 정세는 최고조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 같이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국면에서 정치권의 책임이 더없이 막중하다. 모든 갈등과 불화를 정치의 장(場)으로 끌어들여 녹이고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6월 임시국회는 매우 중요하다. 의사당 안에서 6월 정국의 해법을 모색하지 못하면 걸잡을 수 없는 혼란을 부를 수 있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당은 미디어 관련법 등 스위 ‘MB 개혁법’을 무리하게 몰아붙여선 안 된다. 야당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경제난 극복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대책 마련도 소홀할 수 없는 문제다. 안보위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도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

6월 정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태도다. 추모의 열기에 담긴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와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시간을 끌거나 지금과 같이 편중과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잠시 접어둔 추모 민심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한 소통과 개혁 정치로 안개 속 6월 정국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불경기에 생활물가 급등 서민 허리띠 단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서민과 밀접한 생활물가가 거침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전반적인 물가지표는 안정됐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정반대이다. 여기에 최근 일부 항공·공공요금 인상과 식료품값 오름세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졌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사)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돼지고기(삼겹살·500g)의 5월 넷째 주 평균가격은 9천550원(소매가격)으로 2주 전(6천900원)보다 38.4%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이런 업계가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티는 데다 당국 역시 단속을 소홀한 탓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아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발표하는 대책이 실효성 있을 리 만무하다. 물가 당국자들이 현장을 누비며 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은 불황에 따른 소득감소에 이어 물가급등으로 허리가 휘 지경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변수들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정부의 소홀한 물가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52개 주요 생활물가인 ‘MB물가지수’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허언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값이 급락했지만 물가 상승세는 그대로다.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식료품과 유류 물가는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업계가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티는 데다 당국 역시 단속을 소홀한 탓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아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발표하는 대책이 실효성 있을 리 만무하다. 물가 당국자들이 현장을 누비며 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은 불황에 따른 소득감소에 이어 물가급등으로 허리가 휘 지경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법조칼럼

손진홍



올해 고등법원에서 공보권 겸 기획법관을 맡게 되면서 재정신청사건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신청사건을 몇 개월 해본 결과, 신청당사자의 인식이 법제도와 다소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이 기회에 Q&A 형식으로 재정신청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Q>재정신청을 제기하려면 꼭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하는가요. <A>일반적으로 먼저 검찰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①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②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은 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고도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법원의 재정신청결정에 대하여

기고

송광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지역할 수 없는 흐름이며 우리 사회가 겪어온 가야할 동반자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구 가운데 외국인은 2%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전체구구의 20%가 다문화가정이 될 전망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시대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아 전국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렸다. 우리 북구는 지난달 16일을 ‘북구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다문화 가정과 외

아 2세들이 성인이 되면 우리사회 구성원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다문화사회는 우리의 미래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공유했을 수도 있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배타성과 경계심을 풀고 이해와 포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북구도 다문화가정이 1천세대가 넘어섰다. 광주지역 다문화가정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북구는 다문화사회 대응책으로 단발성 정책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재정신청 이렇게

부터 10일 내에 제출해야 하고,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Q>재정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은 항상 이를 받아들여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해주는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의 적법요건과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재정신청된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이미 두 번 판단을 받은 사건들인지라 법원에서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보지 않는 것은, 아직도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하려는 시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감정싸움 끝에 상대방이 미워져서, 계산이 서로 맞지 않아서 등등 여러 원인이 있어 보이지만, 거의 그 신청들은 이미 기각될 운명을 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그런 경우 권리구제를 해줄 수 있는 훌륭한 민사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판사>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요. <A> 재정신청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2회에 걸친 판단 후 법원의 판단까지 합하면 3회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신청자들은 형사소송법상의 일반 재항고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기도 합니다. 위 질문들은 재정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당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질문을 간추려 본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점은, 아직도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하려는 시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감정싸움 끝에 상대방이 미워져서, 계산이 서로 맞지 않아서 등등 여러 원인이 있어 보이지만, 거의 그 신청들은 이미 기각될 운명을 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그런 경우 권리구제를 해줄 수 있는 훌륭한 민사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판사>

다문화가정 우리의 가정이다

국인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외국인들이 장기를 자랑하고 손수 만든 공예품도 전시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통을 이루고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였다. 세계는 이념이나 국경의 개념이 허박해지고 있다. 문화 간 경계나 국가 간 경계마저 구분이 모호해지는 글로벌시대다. 우리 사회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유입되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단일민족의 개념도 희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저출산과 고령화시대가 맞물리면서 2050년에도 현재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체 인구의 35% 정도를 외국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농촌지역은 3쌍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 가정이다. 다문화가정이 새로운 가족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머지않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미 북구의 회 경제복지위원회 주도로 토론회도 열렸고 조만간 제정안이 현실화 된다. 다문화가정과의 이해폭을 넓히고 자주 접촉하다보면 우리사회와 간극도 좁혀지면서 ‘함께하는 이웃’이 될 것이다. 한국인도 세계 각국에 거주하며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어렵던 시절에는 광부와 간호사 노동자로 진출한 적이 있다. 역지사지로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관용자세를 가져야 한다. <광주시 북구청장>

無等鼓

미네르바(Minerva)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이다.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하며, 에트루리아의 멘르바(Menrva)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네르바는 항상 부엉이와 함께 다녔다. 부엉이는 세상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의 말을 전하는 전령 노릇을 했다. 미네르바의 사자(使者)이자 아이콘이었던 셈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전파하는 데는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의 공이 컸다. 관념론을 집대성하고 변증법을 정형화한 그는 1821년 발간한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든 뒤에야 날기 시작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사회적인 사건과 현상들은 끝 무렵이 되어서야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지식인들이 사건을 예측하며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태가 끝난 뒤 사후 분석이나 한다는 비판도 담겨 있다. 지난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런저런 의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다시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당신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었습니다”는 어느 목사의 추모 글처럼 그는 시대를 앞서간 지도자였다. 그는 정세다. 노 전 대통령이 몸은 단진 곳이지만 부엉이 바위였다든 것과도 무관치 않다. 그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의 타파를 위해 헌신했다.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과 균형을 지키면서도 소박한 삶을 소망했던 서민의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푸터은 관행과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풀지 못했던 개혁과제들과 시대적 모순은 이제 산 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뒤늦게나마 그가 추구했던 이상과 가치를 되새겨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밤이 이슬처럼 내리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미네르바의 부엉이



노인 현혹하는 실버보험 보장내용 꼼꼼히 살펴야

신문 광고지나 TV 광고를 눈여겨보면 노인보험 상품 광고가 매일 나온다. ‘보험계의 빅히트 상품, 실버보험!’ ‘100살까지 살아도 평생보장’이라는 문구로 무척 자극적이다. 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줄 알았던 노년층도 전화 한 통하면 건강검진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한 달에 2만원 정도면 골절에 화상, 치매, 질병 입원비까지 완전히 도맡아도 보장해준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25년 동안 꾸준히 1만9천 800원만 내면 다 보장이 되는 줄 알았지만 1년 후 보험료가 올랐다. 이유는 1년짜리 상품으로 보니까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 광고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자동 갱신 제품이라고 써져 있다. 노인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잘 판단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상책이다. ▲오정환·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차량 도난신고 악용 못하게 법 개정 필요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졸지에 차량을 도난당하면 당연히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다. 이것은 자동차 차주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던지 절도를 당했다면 당연히 취하는 조치다. 그런데 다른 물건과 다르게 자동차는 절도 피해와 그 신고에 있어서 세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돈을 내지 않으려는 데 적잖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차에 대해 차량도난신고를 하고 그게 경찰에 접수되면 과태료 등 차량과 관련된 많은 부분의 행정관계가 정지된다. 차량이 발견되지 않으면 말소등록은 물론이고 각종 과태료 부과 등의 의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자체 조례라도 만들어 차량도난신고를 할 때 체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형경·목포시 연산동

Table with Kwangju Ilbo header,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